

## 기업인 대상 최신 반부패 정책 자료집(2021년 5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기업의 청렴·윤리 경영 문화 확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최신 주요 반부패 정책 자료집을 홈페이지에 정기적으로 게시하고 있습니다. 기업인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주요 내용 (총 4건)

- ① 국민권익위 4개월째 발 묶인 국내 외국학교 부교장 사증 발급 해결(21.4.27)
- ② 국민권익위가 입안한 이해충돌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내년 5월 본격 시행(21.4.30)
- ③ 국민권익위 “연매출 4억 원 이하 영세소상공인 국산대리인 지원”(21.5.12)
- ④ 국민권익위 기업 옴부즈만 출범해 3년간 기업고충민원 373건 해결(21.5.24)

■ 문의사항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총괄과(044-200-7619)

## 국민권익위, 4개월째 발 묶인 국내 외국학교 부교장 사증 발급 해결

- 지난달 10일 신설된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  
제1호 민원 해결 -

(2021. 4. 27., 국민권익위)

국내 외국학교에 임용된 부교장의 사증 발급이 4개월째 지연돼 교육 업무 등에 차질이 있다는 주한 외국기업의 첫 고충민원이 해결됐다.

지난 3월에 신설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의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은 이 같은 제1호 민원을 접수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교육 분야를 포함한 일부 전문인력에 대해 이번 달 19일부터 제한적으로 사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은 국내에서 외국기업이 겪는 고충민원과 행정심판 청구, 각종 부패·공익침해행위의 신고, 청탁금지법 문의 등을 전문 상담사 통·번역을 통해 접수·상담하고 있다.

국내 외국학교에 임용된 부교장의 사증 발급이 4개월째 지연돼 교육 업무 등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민원이 지난달 30일 옴부즈만 전용 창구에 접수됐다.

현재 코로나19 확산으로 일부 국가에 대한 사증발급 업무상 외무, 공무 등 사안에 대해서는 사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교육 분야 등에서는 실제 사증발급이 제한되고 있다.

민원을 접수한 국민권익위 옴부즈만은 법무부 등 관계기관에 민원의 취지와 어려움을 설명하고 긴밀하게 협업해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그 결과, 교육 분야를 포함한 일부 전문인력에 대해 이번 달 19일부터 제한적으로 사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달 16일 '주한 외국기업 ombudsman'으로 위촉된 국민권익위 김태웅 상임위원은 "한국에 투자해 활동하고 있는 주한 외국기업들은 국내 경제에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라면서, "국내 제도와 문화에 생소한 외국기업들이 고충이나 부패를 경험한 후 문제해결 창구를 찾지 못하거나 언어장벽으로 곤란을 겪을 때 이를 해소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한 외국기업 ombudsman 전용 창구**

전자우편(email) : [acrc@korea.kr](mailto:acrc@korea.kr) 전화 : 044-200-7154

**국민권익위가 입안한 이해충돌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내년 5월 본격 시행**

- 공직자 약 200만 명에게 적용...청렴 선진국 도약 계기 마련 -
- 국민권익위, "내년 5월 이해충돌방지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 제정 등 후속조치 신속 추진" -

(2021. 4. 30., 국민권익위)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관리하고 부당한 사익 추구행위를 근절하는 내용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지난 4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공포되면 시행령 제정 등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국민권익위가 지난 2013년 제19대 국회에 법안을 처음 제출한 이후, 제21대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실을 맺게 됨으로써 8년만에 입법화되었다.

UN, OECD 등 국제기구에서는 오래전부터 공공부문의 부패예방을 위해 회원국들이 이해충돌방지제도를 도입하도록 강조해 왔으며, 미국, 프랑스, 캐나다 등 OECD 선진국들은 일찌감치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하여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엄격히 관리해 오고 있다.

이번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제정됨으로써 우리나라도 국제적 위상에 걸맞는 이해충돌방지제도를 갖추게 됨에 따라, 우리사회의 청렴수준을 한 차원 더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국민권익위는 그간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해 왔다. 제19대 국회부터 제21대 국회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정부안을 제출해 입법화를 추진하였으며, 2018년 4월에는 대통령령인 「공무원 행동강령」에 이해충돌방지규정을 우선 반영하여 시행해왔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계기로 공직자들의 정보나 권한 등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 등 사익 추구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제기되었다.

이에, 반부패 총괄기관인 국민권익위는 LH 사태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직자의 사익 추구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 핵심적인 해결책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임을 언론, 국회 등에 알리는 한편 입법 노력을 전개해왔다.

전현희 국민권익위 위원장을 필두로 관계 직원이 총력 대응하여 여야 정당 대표를 비롯한 국회 관계자들을 직접 방문하여 법 제정을 위한 협의와 설득 과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그 과정에서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시민사회·경제계·직능단체·언론·학계·공공기관 등 사회 각계 대표 32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등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해충돌방지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등 사회 각계에서도 많은 관심과 지지를 보내왔다.

국회도 지난달 17일 정무위 공청회를 시작으로 총 8차례에 걸쳐 법안 소위를 열어 법안을 심사하여 공직자들의 사익 추구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하여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에 적극 부응하였다.

국민권익위는 내년 5월 법 시행까지 1년간 법 시행에 필요한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우선, 5월부터 시행령 제정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하고, 입법절차를 거쳐 연내에 시행령 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수범자인 공직자들이 법 내용을 충분히 이해해 공직사회 내 실천규범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권역별 설명회, 안내서 제작 등 교육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일반국민이 법 주요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 대국민 홍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공직자의 지위나 권한을 이용한 부정한 사익추구 행위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이해충돌방지장치가 마련되기까지 함께 해주신 국민들을 비롯하여 법 제정을 위해 노력해주신 시민사회·언론·국회 등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며, “이해충돌방지법은 대한민국이 한 차원 더 높은 청렴국가로 발돋움하는 역사적 이정표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권익위는 범정부 반부패 컨트롤타워로서 LH 사태로 인해 실추된 공직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가청렴도(CPI) 세계 20위권 청렴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정착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 “연매출 4억 원 이하 영세소상공인 국선대리인 지원”

- 중앙행정심위,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받아 생활고 시달리는  
영세소상공인 구제노력 강화 -

(2021. 5. 12., 국민권익위)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으로 고통 받고 있는 영세소상공인들이 행정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경우 국선대리인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그동안 개인에 한해서만 경제적 여건을 고려해 국선대리인을 지원하고 있었다.

하지만 올해 업무계획에서 청구인이 법인인 경우에도 경제적으로 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렵다면 국선대리인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었다.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번에 국선대리인 지원 대상이 되는 영세소상공인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행정심판을 청구한 영세법인은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및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에서 발급하는 ‘소상공인확인서’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http://www.hometax.go.kr))에서 발급하는 ‘매출증빙서류\*’를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서’와 함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면 된다.

\*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 증명 중 택1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 중 직전년도 매출액이 4억 원 이하인 영세법인에 대해서는 국선대리인을 선임해 주겠다는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영세소상공인들이 영업정지,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 이중고에 시달린다.”라며 “경제적으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영세소상공인들이 무료로 법률 조력을 받아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구제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안내사항 >

### “무비용, 신속처리” 모르면 손해, “소송 보다 심판”

- ▲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연간 1,500건 이상의 국민권익 침해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 ▲ **행정심판**의 모든 진행과정이 **무료**이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에게는 국선대리인을 선임해 **무료 법률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 국민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경우(인용), 행정청은 불복할 수 없습니다(소송불가).  
※ 반대로, 국민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기각 등) 소송을 통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 ▲ 온라인행정심판([www.simpan.go.kr](http://www.simpan.go.kr))으로 언제·어디서든, 청구부터 재결까지 한번에!

## 국민권익위, 기업 ombudsman 출범해 3년간 기업고충민원 373건 해결

- 강원 양구군 민통선 내 무주지 국유화 갈등,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매각 갈등 등 각종 기업 어려움 해소

- '기업고충민원 해결 사례집' 24일 국가산업단지 등에 배포-

(2021. 5. 24., 국민권익위)

국민권익위원회 기업 ombudsman이 지난 3년간 코로나19·개발사업 등 8개 분야, 복잡하고 다양한 기업의 장기 숙원 민원 등 총 961건 중 373건(해결율 38%)을 해결해 기업 활동 여건을 개선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더불어 잘사는 경제”의 성공적 이행을 지원하고 기업 고충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2017년 12월 출범한 기업 전문 ombudsman의 3년간 성과를 발표했다.

대표 사례로 강원도 양구군 6.25 수복지구의 무주지 소유권 분쟁관련 화훼·과수·축산업 등 기업형 영농법인의 민원에 대해 범정부전담팀(T/F)을 구성하고 법적 기반인 특별조치법을 제정했다.

이에 따라 관계기관 간 조정안을 마련해 70여 년간 해결되지 않고 있던 해안면(일명 편치불 마을)을 포함한 38선 접경지역의 무주지 민원을 해결했다.

최근에는 대한항공 소유부지인 송현동 부지 매각에 대한 사회적 갈등 민원을 조정해 역사 문화적 가치를 살린 공적 공간을 조성하고 이를 시민에게 돌려주는 기틀을 마련했다. 동시에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항공기업의 자구노력을 지원했다.

또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폐업상태에 이르렀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의 고충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총 40

회의 기동해결 특별 컨설팅과 기업고충현장회의를 개최하고 196건을 해결했다.

국민권익위는 기업 ombudsman 출범 후 해결한 각 분야별 주요 사례를 선정하고, 각 사례별 맞춤형 민원 해결 포인트를 소개하는 ‘기업고충민원 해결 사례집’을 제작해 24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가산업단지 등에 배포했다.

또 국민권익위는 기업과 국민이 사례집을 볼 수 있도록 누리집(정책홍보>공통자료>결정례·백서)에 게시했다.

사례집은 고충민원 신청 방법부터 분야별 해결사례를 소개하고 있어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업과 유사한 민원을 처리하는 각 행정기관의 적극 행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이 직면한 어려움이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절박한 상황”이라며, “기업민원 해결 성과를 바탕으로 마련된 이번 사례집이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기업의 눈높이에서 소통해 기업의 고충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